

지난달 광주 고용·실업률 악화 지속

자영업자 1년새 1만4000명 감소
임시근로자 늘어 일자리 질 악화
전남은 고용·일자리 질 소폭 회복

지난달 지역별 고용지표에서 광주와 전남의 회복이 었었다. 광주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고용률과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등 악화세를 면치 못했고, 전남은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소폭이지만 회복세로 돌아섰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78만 7000명) 대비 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61.2%로 0.3%포인트(p) 하락했으며, 실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000명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0.5%p 오른 3.1%를 기록했다.

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8000명(-33.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4000명·-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2.7%) 등이 감소했고, 건설업(3000명·4.5%),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2.9%) 등은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전반적인 지역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질도 악화를 거듭했다.

지역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0.1%) 감소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4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9.4%)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5000명(0.8%)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1만명(-5.6%)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모든 항목에서 감소폭이 컸다. 광주시 자영업자는 6월 기준 13만 6000명으로 1년 새 1만 4000명(-9.2%) 줄었고, 무급가족봉사자도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취업자 수는 101만 3000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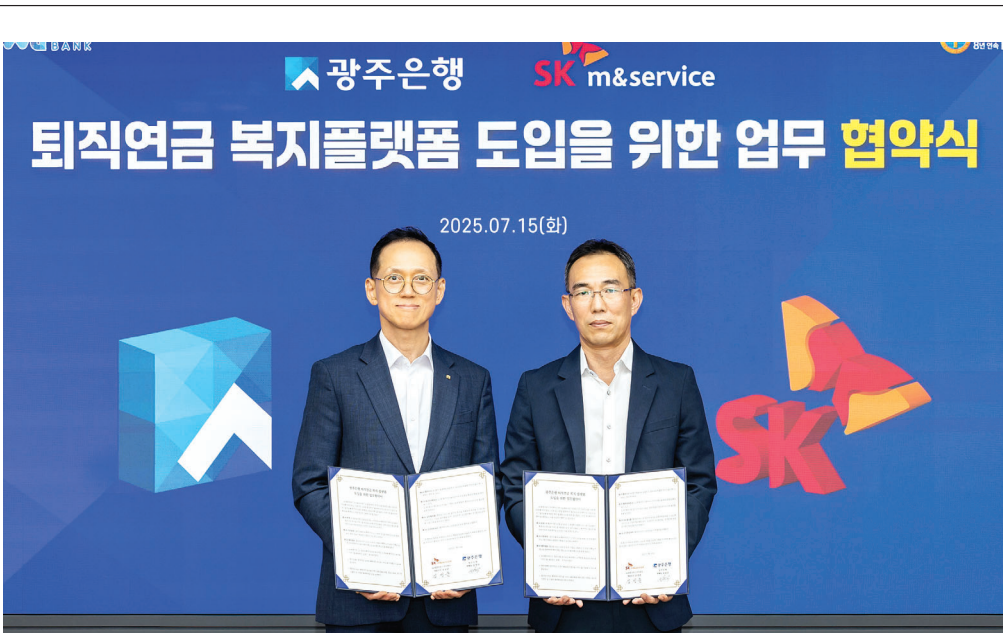
101만 6000명으로 3000명(0.3%) 증가했고, 고용률도 0.3%p 오른 66.9%를 기록했다. 남성 취업자가 5000명 늘었고, 여성 취업자는 2000명 감소한 결과다.

반면 실업자는 2000명 감소한 2만 5000명, 실업률도 0.2%p 감소한 2.5%를 기록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7만 명으로 1년 새 1만 6000명 대폭 늘었고, 제조업(+1만 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2000명) 등이 증가했다.

일자리 질도 두달 연속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달 전남지역 상용근로자가 1만 9000명(4.9%) 증가한 41만 6000명을 기록한 데다, 일용근로자는 1000명(-1.5%)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남 역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남 자영업자 수는 2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1만 5000명(-4.9%)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퇴직연금 복지 플랫폼 도입

SK엠앤서비스와 업무협약

여행 할인 등 각종 우대서비스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SK엠앤서비스’와 ‘퇴직연금 복지 플랫폼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과 김성준 SK엠앤서비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광주은행 퇴직연금 고객 전용 베네피아’ 플랫폼을 통해 여행·여가·레저·쇼핑·건강 관리·취미 및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서비스로 국내외 여행 할인,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온라인 쇼핑 최저가 보장 등을 제

공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오는 8월부터 광주은행 홈페이지, 광주Wa뱅크앱, 모바일웹뱅킹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후 일주일 뒤 베네피아 회원가입 시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임양진 광주은행 신박부장은 “이번 협약이 광주은행 퇴직연금 고객님을 위한 부가서비스 확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엠앤서비스의 플랫폼 베네피아는 국내 3700여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지 플랫폼으로, 1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택적 복지사업 시장 점유율 1위의 복지 플랫폼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지난해 수주 사우디 대규모 민자 발전사업 본격화

5조 5000억 규모 자금 확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디위 태양광 사업’, ‘사우디 루마1·나이라1 가스복합사업’에 필요한 자금 5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각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 체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 금융조달을 완료했다.

특히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이 사업 자

체의 수익성과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받는 PF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지난 30여년 이상 쌓인 해외사업의 개발·운영 경험 및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PF를 성사시킨 기관이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해외 PF 방식으로 국내 수출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성사시킨 22·23번째 사업이 됐다.

사우디 사디위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0월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사우디 내 태양광

발전사업 중 단일 기준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25년간 54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수주한 루마1·나이라1 가스복합발전사업도 3.8GW 규모로, 25년간 4조원 가량의 매출이 예상된다.

두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한다. 한전은 이번 계약이 향후 중동 발전사업에서 현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과채류 수확하는 AI로봇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관계자가 AI 기반 과채류 수확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리어 프리 인증기관 11곳 중 10곳 수도권에 집중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광주상의 대통령실에 균형 건의
심사 인프라 없어 수요 못 따라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BF) 인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인증기관의 지역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F 인증 제도의 개선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2008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고, 도시재생과 초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 맞물리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BF 인증서 발급 기관 11곳 중 10곳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탓에 지방 공공기관과 시·군업체 사이에선 물리적 거리나 대면 심사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증 기관은 나주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일하다.

BF 인증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188건에 불과했던 인증 발급 건수는 2024년 2640건으로 10년 새 14배 증가했다.

인증 대상도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 공원, 여객시설로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인증 기관 수와 심사 인프라는 정체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인프라 정제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승인 소요 기간이 330일에 달했으며 일부 사업은 인증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졌다. 특히 대전시 갈전동 생태습지 공공화장실은 2024년 4

월 착공 이후 1년이 넘도록 인증을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한 유치원은 특수학급 화장실에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예비인증 단계에서 ‘성인용 장애인 변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 설계를 수정했다. 하지만 본인증에서는 사용자인 발달장애 유아에게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했다.

같은 시설을 두고도 심사기관이나 심사위원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심사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으면 설계 변경, 공기 연장, 예산 증가 등으로 이어져 행정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광역권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인증 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 인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 아침 식사·문화 행사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업 10곳 선정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오는 31일까지 아침 식사·문화 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내일이 행복한 AI, 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 참여 기업으로, 신입 직원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직원들의 조기 퇴사

를 막고 조직 화합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지원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아침 식사(7개사) 또는 문화 행사(3개사)를 선택 지원할 예정이다.

아침 식사는 커피차로 지원 기업에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지원하고 문화 행사는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KT 허위·기만 광고 논란…방통위 조사 착수

“SKT 해킹 사고 이용 위법 조사”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

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변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던 SK텔레콤은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3일째 먹통’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 운영

랜섬웨어 해커 그룹 공격 파악

개인정보 유출 현재까지 없어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장애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요 보증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장애의 원인을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악하고, 자체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전산을 복구 중이다. 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SGI서울보증은 일부 매체가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메일 등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연락이 오더라도 유관 전문기관과 논의를 거쳐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현재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

다고 덧붙였다.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와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은 누구나 전화(02-3671-5991~5993)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피해신청이 없을 때까지 신고센터를 무기한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금액이 확정될 경우 전액 보상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86.38	(-28.90)
↓ 코스닥	812.23	(-0.65)
↓ 금리 (국고채 3년)	2.459	(-0.004)
↑ 환율 (US D) 〈오후 4시 47분 기준〉	1386.85	(+6.65)